

투데이 칼럼

독일 에르하르트 경제장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기 독일 정치에는 아데나워 총리가 있었다. 그리고 경제에는 에르하르트 경제장관(2대 총리)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독일의 변역에 크게 기여했다.

에르하르트는 처음에는 미군 점령 지역의 경제 총책임자로 있다가, 나중에 아데나워 총리 밑에서 14년간 경제장관을 지냈다. 그는 1948년 화폐개혁을 발표하면서 군정시정부가 시행하던 배급제와 가격통제를 철폐했다.

군정시정부가 취소하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미 동독에는 소련식 계획경제 체제가 들어섰는데, 서독의 경제가 이를 이기지 못하면 서유럽의 공산화를 어떻게 막겠느냐며 6개월 동안 자기 뜻에 맡기라고 설득했다.

군정장관이 이를 받아들여서 상황이 진열장에 나오고 공장이 연기가 나면서 독일의 경제부흥이 시작됐다. 에르하르트가 시작한 독일경제 시스템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부른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가 해결하는 정책 방향이다. 사실 사회적 시장경제의 뿌리는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1939년 미국 언론인 볼터 리프만이 파리에서 국제학술회의를 연 것이 기원이다.



정복규  
논설위원

1929년 미국 윌스트리트가 붕괴하고 대공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자 자유주의 토론이 벌어졌다. 결국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강력한 정부 두 가지가 병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흔히 신자유주의를 시장에 맡기면 다 된다는 사상으로 인식하는데, 원래 의미는 아니다. 독일 경제에서 주목받는 것은 협력적 노사관계이다. 그 비결로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가 있다.

독일의 패전은 역사적으로 노사관계에 도움을 줬다. 승전국들은 독일의 기간산업인 석탄·철강산업 업체들이 1·2차 세계대전을 부추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본가 혼자 기업의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하려면 근로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독일은 이런 승전국의 요구로 1951년 석탄·철강산업에 관한 공동결정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자 독일 노총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제안했다. 원래 영국식 노동운동은 갈등을 전제로 근로자 권익을 지키는 것이다.

반면 독일은 노동운동의 방향 전환을 이루었다. 1950년~1960년대 선진국 중에서 노사분규가 가장 적은 나라가 됐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 한국도 노동자 경영참여제의 일환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경영계와 보수언론은 경영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대한다. 독일은 공동결정제도가 노사관계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입증되자 1976년 여야 만장일치로 2천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독일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들에 이윤을 붙이면, 독일은 노사분규도 없고, 출하도 제때 맞추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영국도 1976년 노동당 정부 시절에 노사분규가 심해 이를 도입하

려고 했는데, 노조 반대로 실패했다. 독일의 협력적 노사관계는 산별노조체제가 또 다른 축을 이룬다. 노사관계는 산별체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노조가 힘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 파업인데, 산별체제에서는 파업이 쉽다.

개별 기업에서는 파업을 못한다. 독일은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심하지 않다. 산별체제에서 임금을 일정하게 정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직장 이동도 어렵지 않다. 반면 우리는 기업별 노조이다.

에르하르트의 사회적 시장경제 정책이 성공하자 기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1949년, 53년, 57년 총선에서 세 번 연속 승리했다. 결국 사민당도 1959년 정경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주요 산업과 금융의 국유화 정책을 모두 포기하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독일은 내각제를 통한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적 안정이 선순환을 이룬다.

경제 권력이 커지면 정치를 좌지우지하려 한다. 미국도 의회가 완전히 월가의 로비스트에게 당하고 있다.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권력의 힘이 크지 않다. 독일식 내각제라는 정치시스템과 사회적 시장경제가 연계돼 있어 가능한 것이다.

독자재언

학교폭력 예방 이제는 모두가 함께해야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대응, 청소년 범죄 예방, 소년법 선도, 위기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은 시기별(신학기·방학·졸업 기간 등), 대상별(초·중·고)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경찰·학교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폭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찰청 기준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12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는 경찰청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접수 건수를 보면 2020년 2만8241건, 2021년 3만 7845건, 2022년 4만30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위 자료를 볼 때 이제는 경찰과 학교만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경찰, 학교와 더불어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여러모로 대처, 가정에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대화를 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 즉시 학교나 117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해 적극적인 1:1 상담을 통해 크고 작은 학교폭력을 사전적 방지해야 한다.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치유를 위한 노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대근고청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무사해서 다행이야”



지난 13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에서 네팔 남성(왼쪽)이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가족을 만나 포옹하고 있다. 네팔 정부는 이스라엘에서 히미스의 기습 공격으로 숨진 자국 유학생 17명의 시신을 국내로 이송하고 자국민 200여 명을 전세기편으로 대피시켰다.

사설

도내 신규임용 예정교사 연수

전북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은 올해부터 신규임용 교사들의 교직 적응을 돕고,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연수를 운영한다. 이미 지난 2월 10일부터 24일까지 '중등 신규임용 예정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중등 신규임용 예정 교사 총 377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연수에는 사립학교 교사 79명도 참여했다. 사립학교 교사가 임용 전 연수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수는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수업 혁신을 통한 수업 전문성 신장 및 책임교육과 신규 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올해 신규교사 대상 연수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맞춤형으로 연수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과 협력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10시간에 걸쳐 교육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지역 현안 문제 및 교직 실무 중심으로 연수 과정을 운영했다.

문병기 원장은 "신규교사들의 젊은 패기와 새로운 교육이론이 기존의 선배 교사의 경험과 조화를 이뤄 멋지게 성장해야 한다. 교육 연수는 신규교사들이 존경받고 신뢰받는 스승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은 최근 다목적 소극장인 '연화관' 개관식을 가졌다. 주요 시설은 최첨단 음향·방송 장비 및 조명 시설 갖춘 공연장과 연습실, 대기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연과 특강 등 고품질 연수를 통해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예술 교육 활성화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전북도교육청이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을 열어가자는 주체가 돼 주기를 바란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요즘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보수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절묘한 세력 균형은 1980년대 민주화로부터 시작됐다. 2017년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에 이를 때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2016년 대규모 촛불시위로부터 시작된 정치적 격변이 문제였다. 민주주의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주도한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 역사정산'은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를 만들었던 정치, 사회적 기초로서의 민주화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 간 협약의 부정과 해체를 의미한다.

그 결과 진보, 보수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각해졌다.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게 됐다. 적폐청산 기초는 '관계 민주주의의 전형적 모습'이다.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과거 청산 방식은 양극화를 불러들였다. 사회 분열을 초래한 것이

다. 역사청산이란 위험하고 급진적이다. 촛불시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분출하는 계기가 됐다.

민주화 운동을 잘했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치를 잘 하는 게 아니다. 운동 중심으로 정치를 이해하다 보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게 된다.

진보, 보수간 정권 교체기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개선하기가 어렵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잇기 마련이다. 보수 세력은 권위주의 체제에 뿌리를 두면서 반공이념과 경제 발전 주의를 신봉한다. 진보 세력은 민주적 가치와 원리를 중심으로 구체제의 유산을 개혁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이들은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양당체제의 틀을 갖추어 간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대통령의 권력집중화 △정당 구조의 특성 △국기에 대한 시민 사회의 변화 등 구조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인식이 더 커지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